

# 앞으로의 환경정책

노재식

한국대기보전학회 고문,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의원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70년대 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년대 초부터 강력히 추진된 공업화 계획과 급속한 도시화에 비롯되어 누적된 환경문제가 오늘날에 동시 다발적으로 폭주함으로써 갖가지 환경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드세진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한편 ESSD개념을 내세운 지구 환경문제 등 국제적인 조짐에 대한 대책도 그 동향 파악과 대중요법에 급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수립, 추진중인 신 경제 5개년 계획에는 분야별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환경 행정기반의 정비와 맑은 물 공급 대책에 2조4천억원, 폐기물 관리에 9천9백억원을 투자하는 등 뒤늦은 환경개선 노력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NIMBY 현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됨으로써 그 가시적 개선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낙동강 오염사고의 연발등을 겨냥한 물관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환경투자에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기업의 적극성 부족도 문제이거니와 국민의 실천의식도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 보존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킴과 아울러 기업들의 경영시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재방화·국제화 추세에 적의 대비케 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책과 제도적 장치의 획기적 개발보장과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UR 타결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의 도래가 국내 환경관련 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과 무역규제를 연계시키는 GR 논의가 일부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 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동북아 권역내 대기·해양환경악화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논거에 바탕을 둔 대응 노력을 구체화 시켜야 할 개제를 이르고 있음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점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1.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재원의 조기확보
2. 오염요인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발 정착
3. 청정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과학기술의 선진국 수준화를 통한 국내 환경보전에의 기여와 환경산업의 육성
4. 환경 보전 중심의 새마을 운동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내실있는 환경보전 마인드의 확립
5. GR 등 국제 환경 압력에의 능동적 대응 잠재력 배양

끝으로 이 모든 환경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게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권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함을 재 조명해 두는 바이다.